

농어촌공사 전남,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워크숍 개최

중앙·광역·기초 협력체계 구축과 기초지원기관 활성화 방안 모색

김육봉 기자(=전남) | 2025.11.06. 09:21:10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워크숍(주제강연) 개최.2025.11.05©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현장 정착과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광역·기초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는 5일 나주시 동신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에서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현장 안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광역·기초 단위의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안과 역할 정립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워크숍에는 전남 21개 시·군의 농촌공간계획 담당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중앙 및 전남지역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관계자 등 약 80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충북연구원 한승석 연구위원이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역할과 협력체계'를 주제로 기초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어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김은하 연구위원이 '주민참여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사례'를 발표했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기초지원기관 활성화 및 중앙·광역·기초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기초지원기관의 전문인력 확보 한계 ▲공무원 순환보직에 대응한 전문직위제 도입 필요성 ▲주민제안·주민협정 등 주민참여 제도 지원 역량 강화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기초지원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재식 전남본부장은 "농촌공간계획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실행력 중심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전남본부는 중앙과 지방을 잇는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024년 전남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 지원과 현장 컨설팅을 수행 중이다. 본부는 이번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농촌공간계획 대상 시·군의 기초지원기관 지정 확대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